

## 북한 위기와 평화국가 일본의 평화외교\*

### The Crisis of North Korea and the Task of Japan's Peaceful Diplomacy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_동경대학교

Wada Haruki \_The University of Tokyo

번역: 이경미 \_서울대학교

Lee, Kyung Mi \_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봄 동북아시아에서 최대의 문제는 북한 위기였다. 여기서 북한 위기란 북한을 둘러싼 위기적 정세를 말한다. 그것은 북한의 대외정책 및 군사노선의 위기와 북한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대북정책의 위기가 맞물리면서 생겨나고 있다. 본래 위기는 직선적으로 심화하지 않는다. 긴장의 고조와 완화의 국면이 번갈아 발생하면서 말하자면 나선형으로 심화한다. 우리의 지역은 지금 바로 전쟁과 평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I. 북한이 걸어온 길

북한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중국공산당 당원이면서 소련에 망명했던 김일성을 지도자로, 소련 점령 하에서

---

\* 이 글은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가 『世界』(2017)에 기고한 “北朝鮮危機と平和國家日本の平和外交”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번역을 처음 제안한 호주 국립대학교의 개번 맥코맥(Gavan McCormack) 명예교수, 번역을 허락한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그리고 번역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과정의 이경미 선생님에게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정치평론학회 편집이사 이현휘.

당(黨)=국가 체제, 혹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국가건설을 시작했다. 당초부터 민족 공산주의와 지도자 숭배의 경향이 강했지만 당=국가 체제는 소련, 중국, 동유럽에 공통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필자가 보기에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유격대국가’(遊擊隊國家) 혹은 ‘수령제국가’(首領制國家, 스텔라 마사유키(鐸木昌之) 설)라 불리는 독특한 체제로 이행했다. 하지만 1994년에 경제 파국 와중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의 지도로 '정규군국가'(正規軍國家)라 불릴 수 있는 비상체제, 북한이 표현하는 바 '선군체제'(先軍體制)로 이행을 했다. 2010년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깨달은 김정일은 막내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동시에 선군체제를 당=국가 체제로 되돌렸다. 이듬해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당=국가 체제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통치를 시작했다. 군사는 김정은이 담당하며 아버지 이래의 핵무장노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는 내각이 담당하며 일정한 개혁정책을 시행하여 국내적 안정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다.

당=국가 체제를 취하는 나라로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있는데,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함으로써 생존에 성공하고 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라는 체면은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일정 정도의 개방정책을 시행한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외적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제는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고 미국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표명해왔다.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 평더화이(彭德懷)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한편으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를 다른 한편으로 체결되었다. 클라크는 당시 유엔군에 참가했던 16개국(미국,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 후 제네바 회의가 열렸지만, 통일선거 방안과 외국군대 철수문제로 대립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정전협정에 머무른 채 양군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개전 전에 영국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정전 이후 20년이 지난 1973년부터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15개국과 국교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사건이 된지 오래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인민공화국도 현재 유엔군에 참가했던 16개국 중 13개국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은 것은 미국, 한국, 프랑스 세 나라 뿐이다. 그 중 한국과는 이미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프랑스는 평양에 무역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요컨대 평화체제 문제란 결국 북미 간에 화해가 없는 상태를 해소한다는 그 한 가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화인민지원군이 철수한 1958년 이후에는 1961년 7월에 소련 및 중국과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다. 북한은 이 조약에 의해 소련의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9~91년에 세계사적 대전환이 발생했다. 동서냉전이 종결되면서 소련은 미국과 화해를 이루었으며, 소련 산하에 있던 동유럽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한편 북한은 소련과 맺었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유명무실화 되자 핵우산의 상실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유럽의 당=국가 체제와 국가 사회주의 체제는 곧 붕괴했다. 중국은 이보다 17년이나 이전에 이미 미국과 화해하여 전환을 이룩하고 있었다. 또한 베트남은 1975년에 미국과의 전쟁을 전면 승리로 종결한 바 있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북한은 자국의 활로로 세 가지 옵션을 채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옵션은 한국과의 국가적 공존의 승인이다.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1991년에 실현) 상호 승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기 위해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것이었다. 1989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한 소련의 셰바르드나제(Eduard A. Shevardnadze) 외무장관에게 김영남(金永南) 외무상은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동맹관계에 의거했던 약간의 무기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朝日新聞』 1991년 1월 1일). 세 번째 옵션은 일본과의 국교수립이다. 배상이든 경제협력이든 일본에서 새로운 자금과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 김일성은 가네마루(金丸信)·다나베(田邊誠) 북한방문단과 함께 3당(黨)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북일 간에서 수교교섭이 개시되었음을 표명했다.

## II. 핵무장이라는 옵션-북한의 성공과 주변국의 실패

핵무장, 핵개발이라는 옵션은 미국에 강력한 경계심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막 시작했던 북일 교섭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개입하다가 결국 중단하게 만들었다. 1991년 12월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고민이나 주저도 있었겠지만, 결국 핵개발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1993~94년에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전쟁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북미 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은 핵개발을 중지하는 듯 보였지만, 소련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일반적인 수준의 무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더욱 핵무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는 한일과의 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의 부시정권은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국의 노력으로 2003년에는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개시되었다.

2004년 북한을 두 번째 방문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핵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며 “생존권이 보장된다면 핵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한편,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때린다면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이라크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일본외무성 작성 회의록).

그러나 2006년 5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고이즈미 정권은 최초의 선제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 선제조치에 반발하여 같은 해 10월 9일에 핵실험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2009년에도 반복되었고,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이즘에 북한 당국자들은 ‘핵무장으로 안전보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힘쓸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다. 당시 북한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터에 국교 정상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주장했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해마다 규모와 내용을 증강하자 북한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2015년 1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미국에게 합동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반응 없이 끝나고 말았고 2016년부터는 이른바 '참수작전(斬首作戰)'이 선전되었다.

물론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자체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핵을 목표까지 도달시키는 수단이 요구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왕성하게 추진하며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맹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탄도 미사일의 소형화에는 이미 성공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오늘날 핵무기 중심의 전략사상에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3월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 위협과 협박에 대처하고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침략자와 도발자를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핵 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더욱더 강화시켜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외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미국의 핵 무력과 맞서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북한에게 위협한 길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실어야 한다. 북한은 소련이 아니다. 그러한 군비경쟁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Ⅲ. 북미관계는 위험한 적대관계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핵무장을 지지하고자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삼았다. 그는 북한은 “잔인하고 억압적”이고 “유례없는 독재체제”이며 “이러한 체제는 머지않아 붕괴한다”고 보았다(2015년 1월 23일까지의 인터뷰). 그것은 북한이 비핵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제재를 강화시켜서 결국 자멸하도록 몰아내겠다는 정책이었다. 물론 위험할 시에는 외교적 수단도 서슴지 않겠다는 선택지도 지니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카터(Ashton Carter) 국방차관은 2006년 6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한 논문 「필요하면 꺾멸시켜라(If Necessary, Strike and Destroy)」에서 제안한 바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시대에 북한은 핵실험을 4차례나 실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등이 '20년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고 되풀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는 정당한 비판도 있었다.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는 북핵문제를 연구하면서 북한은 핵 군사력을 착실하게 늘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2016년 1월 이 연구소의 시리즈 논문에서 조셉 데토마스(Joseph M. DeThomas)는 제재는 ‘못 없이 망치질하기(Hammer without nails)’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걸기 위해서는 교섭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비판은 오바마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게도 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압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라고 강력 주장하는 한편,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명백한 군사적 옵션으로 위협했다. 시리아 비행장에 59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 또한 분명히 북한에 대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정책 면에서나, 인사 면에서나 계속 해매는 트럼프정권으로서도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옵션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교섭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로 같은 일의 반복이다.

#### IV. 북일 국교수립이라는 옵션-영속적 좌절

북한에게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이다. 냉전의 종결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 속에서 북한이 탈출의 세 번째 옵션으로 본 것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비극적이게도 이 옵션은 핵무장을 향한 두 번째 옵션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두 번째 옵션에 반발한 미국이 세 번째 옵션도 방해한 꼴이 되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1990년 9월,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그리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3당 공동성명에서 주장되었다. 이에 91년 1월부터 북일 수교교섭이 시작되었으나 92년 11월의 제8차 교섭에서 결렬했다. 이후 8년간의 공백을 겪어 2000년 4월에 재개되었지만, 3차례 회담을 가진 뒤에 납치문제로 중단되었다. 그 후 비밀리에 교섭이 진행된 결과 2002년 9월에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때 북한은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한편, 일본은 식민지배가 남긴 고통과 손해를 사죄하고 국교 정상화 이후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납치피해자 8명이 사망했다는 북한 측의 통보에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양국정부 사이에 충돌이 생겨 교섭은 결국 한번으로 끝나고 말았다. 2004년 고이즈미 수상은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국교 정상화를 전진시키겠다고 표명했지만 이것 또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06년 9월 아베(安倍晋三) 정권이 탄생하자 3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표명되었다. ①납치문제는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②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는 없다. ③8명의 사망근거는 희박하며 모두 생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즉시 귀환을 요구한다. 이것으로 북일 수교교섭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2008년 6월과 8월에 아베 내각을 대신한 후쿠다(福田康夫) 내각이 교섭노선을 취하자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포함하여 교섭의 재개를 합의했지만 직후에 수상이 퇴진하면서 어떠한 성과도 거둘 수 없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성립하자 납치문제의 해결을 맹세하면서 교섭을 요구했고 2014년 5월에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내용에는 북한 거주 일본인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독자적 제재

는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북한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면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실시한다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일본은 납치피해자의 전원 사망으로 결론 내린 북한의 조사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양국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제 일본은 북한과 무역관계도 갖지 않고 사람과 선박의 왕래도 없다. 즉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절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재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방문에 이어서 국교수립이 이루어졌더라면 북한의 핵무장이 이렇게까지 진전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V. 환(環) 동해전쟁의 위기

올해 봄 미사일발사를 잇따라 실시한 북한에 트럼프정권이 강한 반발을 드러내자 아베 정권 또한 미국에 동조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3월 29일에는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같은 합동부회(部會)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즉시 검토를 요구하는 제언을 마련하고 30일에 수상에게 제출했다. 4월 6일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사설에 「새로운 위협에 적확하게 대응하라-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이날 아침 아베·트럼프 양 정상은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석탄수입 정지조치를 취한 중국의 대응은 불충분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미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표명했다. 그 직후 시리아에 59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미군의 행동에 대해 아베 수상은 미국정부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미국정부의 표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일본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미국이 승낙의 뜻으로 회답했다고 한다(『読売新聞』 4월 12일 석간). 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은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에 파견되었을 때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해상 자위대 호위함과 공동훈련을 하게 했으며, 호위함에 미군군함을 보호하는 행동까지도 훈련시켰다.

미 해군의 대북 위협행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에 협력하는 행동까지 자위대에 허용한 아베 수상의 정책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무력행사 내지 위협을 쓰지 않겠다고 명기한 헌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북한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비상사태가 반드시 한국전쟁의 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종래 한미 합동훈련이 해마다 강도를 높여갈 때에 전쟁의 이미지는 비무장라인을 넘어 북한군과 한미연합군이 전투를 벌이는 한국전쟁형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Mike Pence) 부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시사했듯이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실시하다가 레드라인으로 지정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의 특정단계에 침범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특정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개시되는 전쟁은 한국전쟁형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동해에서 전개하는 미 해군의 함선에서부터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 공격을 받은 북한은 미 제7함대의 본거지인 사세보(佐世保)와 요코스카(横須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다. 물론 해병대 비행장인 이와쿠니(岩国)와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가 있는 가데나(嘉手納), 요코타(横田), 미사와(三沢) 등의 기지도 북한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올해 3월 6일에 실시된 4발의 미사일 동시발사와 관련해 북한 중앙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이 발사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일본에 주둔하는 미 제국주의자의 적국부대의 기지를 공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포병부대가 실시했다.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는 미군에 따라 무력공격에 반격할 것이다. 이때 북한 비상사태란 한국전쟁이 아니라 환(環) 동해전쟁, 미일·북한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때 북한은 종래형의 탄도미사일로 동해 측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일본해 측에 있는 원전으로는, 니이가타현(新潟県) 가시와자키시(柏崎市) 가리와(刈羽)에 7기(基), 이시카와현(石川県) 시카마치(志賀町)에 2기, 후쿠이현(福井県)에는 쓰루가시(敦賀市)에 1기, 미하마(美浜)에 1기, 오오이(大飯)에 4기, 다카하마(高浜)에 4기, 시마네현(島根県) 마쓰에시(松江市)에 1기, 사가현(佐賀

縣) 겐카이마치(玄海町)에 3기, 총 23기 있다. 거의 대부분이 운행을 중지하고 있지만 이미 사용된 핵연료가 저장수조에 보존되고 있다. 이들 원전을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이하는 동해 측에 이렇게 많은 원자료가 있는 일본에게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일은 나라의 파멸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제 북한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평화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 VI. 모델로서의 미·쿠바 국교회복

거듭 말하지만 일본국헌법 제9조 제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의미는 국제분쟁의 비군사적 해결을 위해 평화외교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위기 속에 있는 일본은 평화외교에 의거하여 위기를 타개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수단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있다. 북일 간에 오랫동안 현안으로 남아있는 국교 정상화의 실현이 바로 평화외교의 수단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국교 정상화는 72년 전에 끝난 식민지배의 청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다.

북일 국교수립에 바로 나아가는 데 적합한 모델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모델인 '무조건적 미국-쿠바 국교수립'이 그것이다. 이를 본받아 '무조건적 북일 국교수립'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적어도 국교수립 후 일정기간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조약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쿠바는 근대에 스페인 식민지였다. 1898년에 미국이 스페인을 쫓아냈고 4년 후에 쿠바를 독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쿠바는 미국의 보호국이 된 것이다. 1959년 쿠바혁명으로 완전히 독립했지만, 미국은 이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타나모 기지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혁명군의 침공까지 후원했다.

결과적으로 세계 강대국 중에서 이웃나라와 수교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미국과 쿠바,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뿐이라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 교섭을 개시했음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는 로마교황의 중개와 캐나다 정부의 원조가 있었다고 한다. 2015년 1월 쿠바 정부는 국내 정치범의 석방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교섭은 1월 21일부터 아바나에서 시작되었고 2월에는 워싱턴에서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2월부터는 미국 방송국 취재진이 쿠바에 들어갔고 3월에는 항공기와 페리의 전세편 운행도 허가되었다.

4월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음을 표명했다. 5월에는 쿠바 정부가 미국 국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0일 양 정부는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미국은 의회가 결정한 경제봉쇄조치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관타나모 기지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었다.

국교수립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활동이 확대되었다. 우편업무는 12월 11일에 재개되었고 17일에는 항공기의 정기편 운행개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3월 20일에 재계 인사들과 함께 쿠바를 방문했다.

오바마 모델은 실로 시사적이다. 수교관계를 맺고 대사관을 설치하고 나서 협의를 통해 각종 제재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이다.

북일 간에서는 이미 2002년의 평양선언이 존재한다. 오바마 모델을 따르면, 우선 평양선언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국교를 수립한 후 기본적으로 현상유지하면서 평양과 동경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세 가지 문제(①경제협력에 대해, 식민지배의 청산사업에 대해, ②납치문제에 대해, 북한 거주 일본인 문제에 대해, ③핵 및 미사일문제에 대해, 경제제재의 해제에 대해)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상유지하면서 라는 말뜻은 일본은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그리고 납치문제에 대한 종래의 회답을 유지하면서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새로운 기반 위에서 모든 문제를 수교하는 나라 간의 통상 교섭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양선언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의 마

음을 표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명에 의거하여 국교 정상화 후에는 '무상 자금 협력, 저금리 차관 공여, 및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한다'고 약속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협력을 위해 합의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양쪽 대사관에서 협의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교섭의 진전은 북한이 핵실험의 정지를 유지할 것인지 여하에 달려 있다. 납치문제에 관한 교섭도 국교수립 후라면 면밀하게 피해자 가족에 의한 현지조사도 실시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정부는 지난 한일합의를 전제로 곧바로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거주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대사관이 설치되면 바로 피폭자 통장을 교부하고 피폭자 원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밖에도 무역에 부분적 금지해제(자연송이, 바지락, 계의 수입)도 실시하고 선박의 왕래, 전세편 항공기 등은 일정 범위로 금지조치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왕래, 문화교류, 인도지원 등은 곧바로 개시될 것이다. 일본에서부터는 예를 들어 NHK교향악단의 평양공연, 일본가수의 공연, 스포선수들의 방문, 히로시마(広島), 나가사키(長崎)에서 열린 원폭피해 관련 전람회와 같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VII. 납치문제의 교섭을 위해서도 북일 국교수립을

현재 주변국들이 북한을 향해 실시하는 제재 강화책은 북한을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켜 파멸시킬 수 있을지언정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거한 군사력 강화책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중국이 제안하는 6자회담의 재개는 중요한 방책이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교섭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불신을 풀어주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불가역적으로 개선하고, 6자회담을 새로운 여건에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일 간의 국교수립은 그러한 여건이 될 것이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위협정책을 추종한 아베 수상이 북일 국교 수립이라는 옵션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원래 납치문제를 발판으로 정치적 지위를 높여 고이즈미 수상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다. 납치피해자 가족회에 대해 피해자 전원의 귀환이 반드시 성취될 것처럼 헛된 약속을 하고 그 때문에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수상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의미 있는 교섭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망통보를 받은 피해자 중 생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만약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있다면, 그런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의미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납치문제에 대해 수준 높은 교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의 테이블 자체를 일신해야 한다. 즉 우선 국교를 수립하고 나서 교섭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아베 수상이 약속을 지키는 방도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베 수상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은 평화국가 일본의 수상으로서 평화외교의 길에 서있는 것이며 북일 국교수립이라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